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결과보고서

2016. 8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결과보고서

2016. 8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일시: 2016. 7. 14.(목)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축하영상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회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토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토론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토론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론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토론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토론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인간과 생명**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세균 | 국회의장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축사

10:30~12:00 세미나

사회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경 | 한국개발연구원장

유병규 | 산업연구원장

박형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장

최경선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규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토론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차례

개회사	1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5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9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25
세미나 기록	41
언론보도 모음	71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20대국회의 개원을 기념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같이 하시지 못했지만 영상과 서면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미나의 토론을 맡아주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님,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또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투자와 같은 내수도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경제는 이제 ‘추세적 침체’ 혹은 ‘뉴 노멀’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성장잠재력 하락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그 동안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준엄한 경제현실 하에서 개원한 제20대국회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경제를 통찰하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잠재성장을 또한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사드배치 등의 외부적 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수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 문제의 해결이나 소득분배의 개선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의 정책과 관습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력의 집중, 빈곤의 대물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은 단편적인 대응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성장둔화와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 악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전인미답의 상황에서 제20대국회가 당면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진일보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0대국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국회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의장 정세균

축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주관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20대국회 개원 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및 재정관련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 중 하나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에 큰 보탬이 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룬 것은 물론 세계 10위권에 드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합니다.

또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지 임시방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야말로 시의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토론을 맡아 주신 국책연구원장님, 언론계 논설위원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축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제20대국회의 개원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준기 처장님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오래 동안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되는 소위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는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가 초래할 불확실성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도, 경제컨트롤타워도 없다는 점입니다.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낙관론’과 ‘경제 비관론’을 오가는 오락가락 현실 인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대시키거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임시방편 땀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미래의 재정 여건 악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싶은 사회,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기회가 있는 사회, 성장의 대가가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축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를 준비하신 김준기 처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경제정책들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 충돌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져갑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부, 그리고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재도약해야만 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의 목표도 달성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 확보 등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감동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한국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결정하는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해법들을 찾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개원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축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먼저 제20대국회 개원을 맞아 마련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한치앞을 볼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조선업,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환경에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헬조선을 외치고, 어르신들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노후절벽의 위험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 걱정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20대국회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님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님이 모두 참석하신 것은 이번 제20대국회가 정쟁에 몰두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제20대국회 개원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갤럽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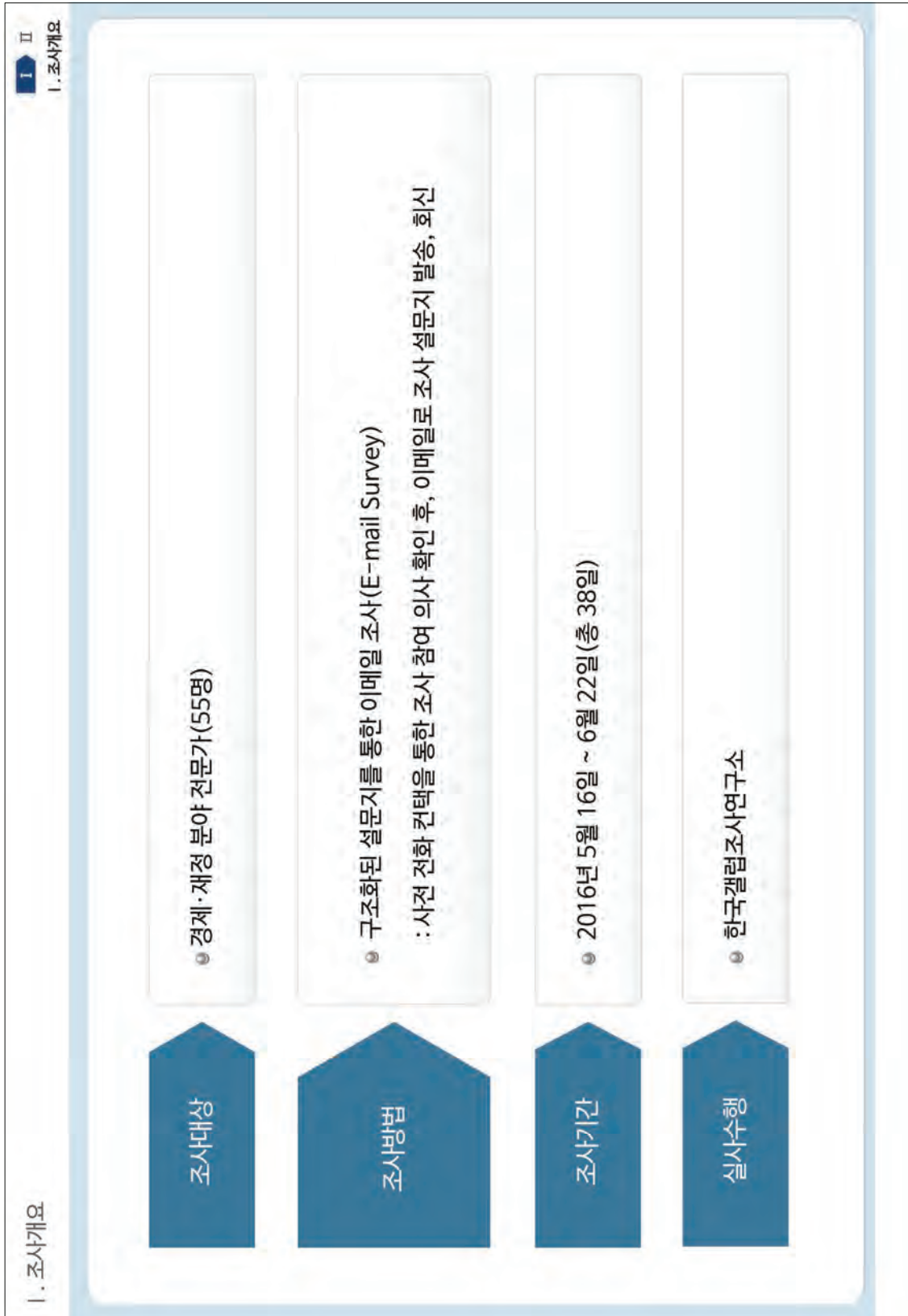
2016. 7.



I. 조사 개요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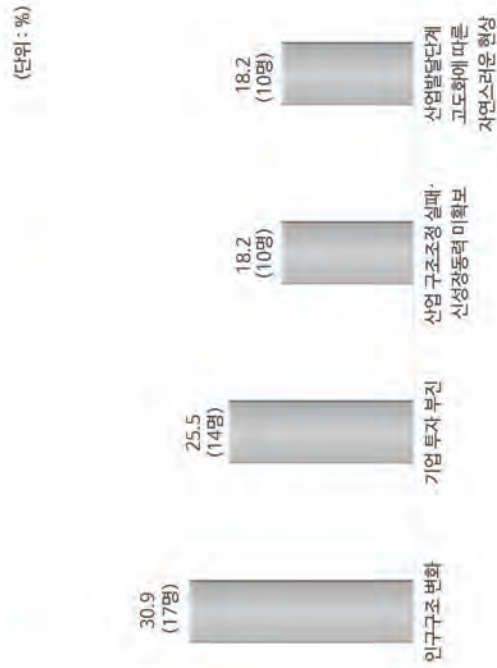
- | | |
|--|-------|
| 1.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 | / 4p |
| 2.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 / 6p |
| 3. 분야별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완 정책 방안 | / 8p |
| 4.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 여부 및 선행 필요 기업 자구책 | / 10p |
| 5. 현재 국가 채무 수준 진단 | / 11p |
| 6. 증세 필요 여부 및 증세 기능 우선순위 | / 12p |
| 7. 2017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한 생각 | / 13p |



1 | 대내적 요인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17명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음(30.9%)
- 그 밖에 '기업의 투자 부진'(14명, 25.5%), '산업 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0명, 18.2%), '산업발달단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0명, 18.2%)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노동시장 경직성
 - 청년·여성 고용 부진 등 고용 관련 요인
 - 양극화 확대
 - 사회갈등구조 등

1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대내적 요인(자유응답) (n=55)



2 | 대외적 요인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33명이 '세계 경제침체'를 꼽음(60.0%)
- 그 밖에 '중국의 성장단계 성숙화·성장을 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 부진'(31명, 56.4%), '중국의 기술 격차 감소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11명, 20.0%), '유가 불안'(10명, 18.2%)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
 - 전세계적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등

|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대외적 요인(자유응답) (n=55)



전문가들은 향후 저성장세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1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이유

- 본 조사에 응답한 55명의 전문가들 모두, 향후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락 요인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단기적 방안을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10명, 18.2%)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세가 새로운 정상상태(뉴 노멀)임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7명, 12.7%)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n=55)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이유 (자유응답) (n=55)



2 |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15명, 27.3%)
- 부실·사양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14명, 25.5%)
-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13명,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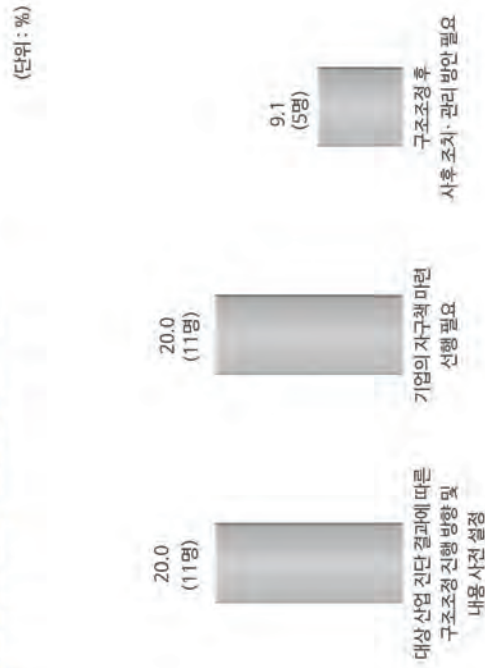
|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자유응답) (n=55)



1 |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 '구조조정 대상 산업 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방향 및 내용 사전 설정 중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구책 마련 선행 필요'를 꼽은 전문가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음(20.0%)
- 그 밖에 '구조조정 후 해당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대체 산업업 육성 방안 수립 등 사후 조치·관리 방안 필요'(5명, 9.1%)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원샷법' 조항의 적절 집행 여부 관리
 - 장기적 기술·연구 지원
 -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 기업 간 업종 진입 전면 허용 및 원청-하청기업 간 배타적 독점계약 불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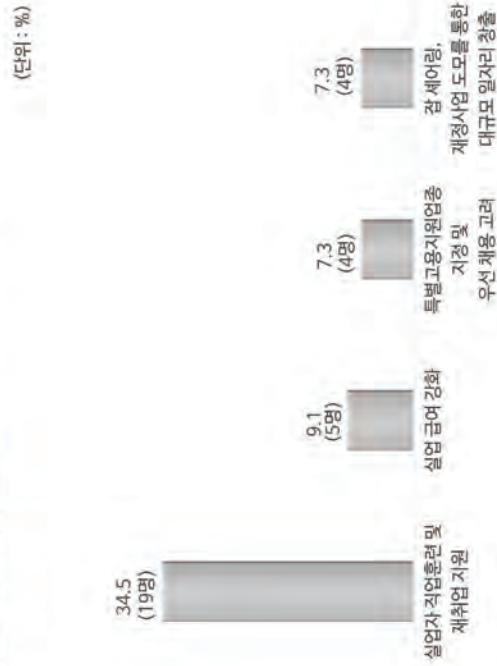
■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완 정책 방안
-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자유응답) (n=55)



2 | 고용 분야

-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세부 의견으로는 '실업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꼽은 전문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음(34.5%)
- 그 밖에 '실업 급여 강화'(5명, 9.1%),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우선 채용 고려'(4명, 7.3%)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이외 '잡 셰어링(Job Sharing), 재정사업 도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4명, 7.3%) 응답도 제시됨
- 기타 의견
 - 고용시장 동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완 정책 방안
- 고용 분야(자유응답) (n=55)



55명의 전문가 중 33명,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1 | 구조조정 시 정부 자금지원 필요 여부

- 55명의 전문가 중 33명(60.0%)은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명(40.0%)이었음

I 구조조정 시 정부 자금지원 필요 여부 (n=55) (단위: %)



2 |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의 자구책

-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3명의 전문가 중 19명(57.6%)은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 자구책으로 '경영진·대주주 경영권 박탈 및 사제 출연 등 책임 부담 필요'를 꼽음
- 그 밖에 '기업 및 근로자 공동 고충 분담', '자금 사용·상환 계획 작성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각각 6명(18.2%) 응답됨

I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의 자구책 (자유응답) (n=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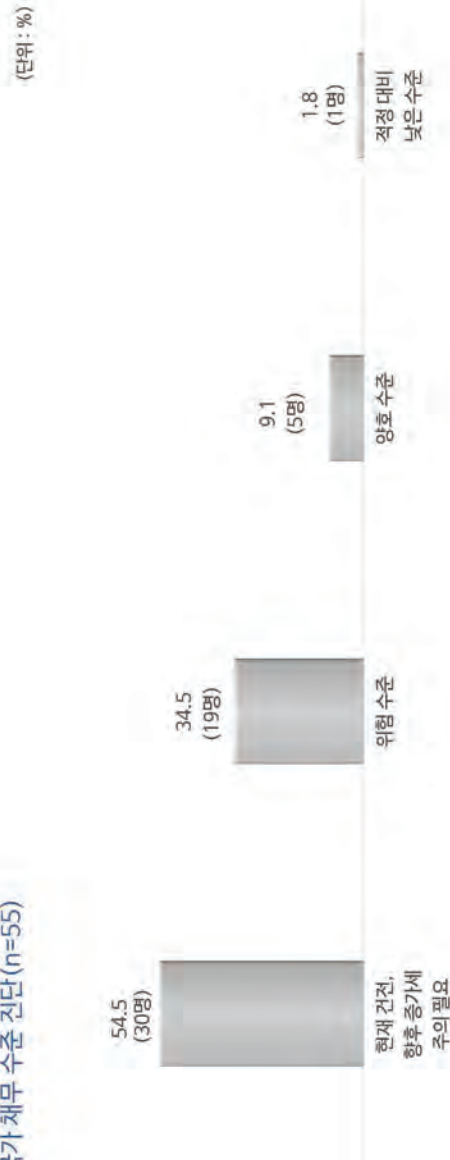


55명의 전문가 중 30명,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증가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국가 채무 수준 진단

- 전체 55명 전문가 중 30명(54.5%)은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향후 증가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 현재 위험 수준이라는 응답은 19명(34.5%), 양호 수준은 5명(9.1%), 적정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명이었음

| 현재 국가 채무 수준 진단(n=55)



55명의 전문가 중 38명, '증세 필요하다'고 응답, 증세 우선순위는 '법인세'

1 | 증세 필요 여부

- 전체 55명 전문가 중 38명(69.1%)은 세율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는 17명(30.9%)이었음

| 증세 필요 여부 (n=55)

(단위 : %)



2 | 증세 가능 우선순위

-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명의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증세 가능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꼽음(16명, 42.1%)
- 다음으로는 '소득세'(10명, 26.3%), '부가세'(7명, 18.4%), '기타'(5명, 13.2%)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주세 등 외부성 관련 세금', '에너지 환경세', '재산세', '부유세', '사회보장세' 등이 응답됨

| 증세 가능 우선순위 - 1순위(n=38)

(단위 : %)



55명의 전문가 중 27명은 '확장기조', 15명은 '긴축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예산 편성 기조 방향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27명(49.1%)이 '확장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긴축기조' 응답은 15명(27.3%), '균형기조' 8명(14.5%), '의견 없음' 4명(7.3%), '기타' 1명(1.8%)의 순임
- 기타 의견은 '기조 방향 선정에 앞서 예산 활용 방법 관련 고민 선행 필요'임

예산 편성 기조 방향(n=55)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세미나 기록



1. 개회식

개회식 사회 경제정책분석과장 연훈수(이하 사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준비한 제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그러면 먼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성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는 네분의 연구원장님과 두 분의 논설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요.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어렵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성장둔화도 뚜렷해지면서 수출이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수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소위 ‘뉴노멀’, ‘추세적 침체’라는 말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저성장 청년실업, 성장잠재력 하락 등과 같은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고령화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 경제국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의 최고전문가와 주요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이런 논의들이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를 대표하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셔서 격려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동 박수)

국회의장 정세균 반갑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기에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 또한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사드배치와 같은 외부 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수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이나 소득분배의 개선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정책과 관습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경제력의 집중, 빈곤의 대물림 등은 단편적인 대응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제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전인미답의 상황에서 우리 20대 국회는 당면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준기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가 참으로 기대되는 바가 큼니다. 함께 지혜를 잘 모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다음으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마련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준경 한국개발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위기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에 내려가면 지방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와 조선업,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상황에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노후절벽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20대 국회에 헌신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가 부디 20대 국회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감사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각각 영상과 서면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축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제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회사무총장직을 해 봤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의 눈으로 나라세정을 살피는 막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안으로는 내수침체와 저성장시대 직면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출구를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잘 준비해 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감사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축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이 계시는데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세미나

사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아까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는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마도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내수와 수출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정치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팩터, 최근에 사드에 대한 논쟁, 또한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간다는 진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증폭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컨센서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이고 또 장기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산정책처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귀한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산업연구원의 유병규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형수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두 분의 논설위원님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선 논설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정남구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일동 박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저희 처가 경제재정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55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봤는데 그 내용이 아마 경제여건이나 우리가 처한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준경 원장님께 먼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2~3분 동안 말씀을 주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저도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성, 생산성마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역동성 약화, 그리고 생산성하락의 주원인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됨과 동시에 여러 규제가 투자와 진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그리고 정책금융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정책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요행을 바라

면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저가수주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비와 고용을 늘려온 것입니다.

중국경제도 과잉설비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중국수출 중 무려 70%가 중국내 투자와 관련된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설비 감축은 한국의 수출격감과 직결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산업에도 부실 극심기업, 좀비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선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추가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당시에 구조조정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는 세계경제의 상대적인 고성장국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간 통폐합이라든가 채무주식전환을 통한 부채탕감 등을 통해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설비감축은 안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의 구조조정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로 제조업이 조정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고통스럽지만 대대적인 설비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도크를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감축해야 하고 사업을 재편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성패는 실업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최근 KDI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 평가분석에 의하면 고용서비스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량과 구직자의 취업률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정도로 고용서비스센터의 업무 효과성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아주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90년대말 당시 외환위기 때의 정책패키지와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책패키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판단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한 얼마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이 수혜집단들이 잘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돌발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내놨을 때, 그리고 이런 정책패키지를 내놨을 때 어떻게 하면 거래비용을 낮추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개발하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토론자 김준경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해도 정부가 신뢰하고 뒤따르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KDI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 이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외란된 말씀입니다마는 정치권, 정치가 문제다, 두 번째는 부패가 문제다, 세 번째는 대기업의 독점적인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득권의 렌트문제가 우리 제도개선, 구조개혁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득권의 렌트를 축소, 타파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나가는 정부 스스로의 리더십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그런 과정에서 새로 취임하신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또 민생국회, 또 경제국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은 유병규 원장님께 말씀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된 게 양극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극화라는 것이 계층간의 양극화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산업별로 또 경기에 있어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원장님께서도 하반기 또는 내년도, 내후년도 정도에 우리나라 업종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책비용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는가는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회가 너무 복잡다기해졌다, 그래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명확히 해서 그것에 집중해야지 정책효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별 경기에 대해서 여쭙보셨습니다.

아쉽게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국내 업종별 경기는 부진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경기 부진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산업 양극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업황이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 12대 주력수출업종, 예를 들자면 자동차, 철

강, 조선, 반도체 이와 같은 산업들의 업황 부진이 특히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국내수출은 8%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주력 12대 수출업종은 10% 정도의 더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요부족과 공급과잉, 또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또 저유가 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이 수출부진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전과 달리 국내업종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고하저의 경기패턴을 보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여건 중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의 통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인해서 저성장 구조가 더 굳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 등 주요국도 자국 이익중심의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영란법 발효 등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내수업종 경기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업종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국내산업의 수익성 악화, 국내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하반기 이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내년 내후년 국내업종 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애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마는 너무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진단이 많다 보니까 장내 분위기도 너무 숙연

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박형수 원장님께 질문을 여쭙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진단이 필요하겠지요. 또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이후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토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형수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브렉시트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마는 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경 편성 등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1/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그나마 완만하게 경기 상승곡선을 이어왔었는데 성장률이 2%대 중반이 되고 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작년말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경기하방국면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반기 경제도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일 본처럼 우리나라도 최근에 저성장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해서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6% 정도 성장률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성장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

연되면서 생산성 향상은 둔화되는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투자 기회가 소진되고 있고, 가계부채의 누적 또 고령화,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해해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증가율이 외국에 비해 아직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민정책을 통해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충분히 더 공급할 여지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여력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시장규제를 개혁한다는지 완화한다든지 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투자둔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정책, 교육개혁을 통해서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 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을 실제로 실용화시키는 융복합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등 정책적인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제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게 되면 10년 후 우리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방하남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참 어렵지요. 고용여건이 정말 악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 고용도 그렇지만 관련된 경제여건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토론자 한국노동연구원장 방하남 감사합니다.

경제 어려운 것은 앞에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 전문가들도 잘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청년실업률이 10.3%를 기록을 했더군요. 두 자릿수를 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 또 청년들로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통계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의 전체 실업률이 3.9%였는데 올해 6월에 3.6%로 0.3% 정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높아졌고, 또는 잘 아시겠지만 기간산업, 특별히 조선산업, 해운산업들이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사정이나 실업률이 상당히 지역 특수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경남, 특별히 울산이나 거제 이런 쪽에서는 그런 구조 조정의 효과들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의 힘이 약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를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고 고용이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와 민간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각자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입법할 때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 전환의 국민적 의식

들이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이니까 2년 전인데 OECD에서 한국경제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 그다음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내수진작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고용창출,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 방향으로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있는 제도적·구조적 방해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정책적인 레슨이나 함의는 이제는 한국이 성장을 위한 투자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고용을 저해하고 가계소득의 진작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뽑은 것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대외적인 여러 요인들, 글로벌한 경제침체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경제와 국가 사회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밖에만 자꾸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화, 그리고 가계소득의 불평등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살아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 개발경제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뉴노멀시대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수진작과 고용창출 방안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들을 착실하게 진전해 나가는 선택과 사회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네 분 원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마도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씀과 더불어서 정부의 선택과 집중 내지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또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대책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대책 같은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외국사람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의 경연장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촛촛하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두 분의 논설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님께 여쭙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쭙보겠습니다.

토론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최경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일단 한마디로 장기비전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유병규 원장께서 왜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해 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적 시각이고,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고 뭔가 앞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뭘

가를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정부를 따라가면 언제쯤 뭐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물론 대통령이 강조하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엉터리가 많지요.

일단 정부가 수시로 투자활성화대책, 내수활성화정책, 규제완화정책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단두대까지 언급해 가면서 규제완화하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규제 중에서 가장 큰 규제가 뭘지 압니까? 면세점을 5년마다 심사해 가지고 멸절한 일자리를 폐쇄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를 정부의 최고위층이 안 없애줍니다. 왜냐? 대기업을 마음대로 줄 세울 수 있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SK, 롯데 것 뺏어다가 다른 두산에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대기업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제를 스스로는 없애지 않으면서도 말단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규제들 열거하면서 그 규제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정책이 진정성을 국민들에게서 받겠습니까? 기업들은 저 정부 따라 하면 규제가 없어지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투자활성화대책을 그렇게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러 번 발표했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30대 그룹을 죽 나열해 보면 그 중에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곳,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 곳, 감옥에 있는 곳 이런 것 다 빼면 10개 그룹도 안 남습니다. 물론 기업가들이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하는 것은 세금 조금 덜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세무조사해서 털어봐라,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 많다는데 한번 파헤쳐봐라, 그다음에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패썹죄다 한번 파헤쳐봐라 해 가지고 수시로 한쪽에서는 투

자활성화대책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기업들을 파해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기비전이 문제인데 사실 현 정부가 공공, 교육, 금융, 노동시장 개혁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해당분야 사람들에게 ‘금융개혁이 뭐니까?’ 하고 물어보면 해당분야 사람들조차 ‘그게 뭐던가요? 규제완화인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이것은 그나마 뭐 파견법이라든지 보여요. 그런데 공공부문개혁도 사실은 공무원연금 조금 조정해 놓은 것 이외에는 새로운 뭐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부가 5년마다 비전을 내놓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 하고 다음 발언기회가 오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준기 너무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구 논설위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저는 정부 경제활성화대책 평가하기 전에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과연 냉정하게 보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해마다 경제전망이 낙관적인데 그 뒤에 최근 4년간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가 실제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추경으로 보강하는, 실질적인 추경까지 포함해서 해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 투자 투자활성화. 실제 정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책기조가 계속 그런데 일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세금도 덜어주고 각종 다른 부담 덜어주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 줄이는 쪽으로 임금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 또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더 낮추도록 하는 것,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생각, 영향을 미치지요.

이것은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테니 다시 소비가 늘고 그래서 다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선순환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까마는 실제 작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외국에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투자하는 것, 주로 자동차투자에 많이 되기 때문에 고용에 별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려운 건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시장의 확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꽤 오랜 기간 세계경제가 조정을 거칠 때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도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 국면이 되고 있지요. 작년 재고 성장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의 한 두 배쯤 되지요. 그러면 다시 투자 안 되고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결국 설비투자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투자하려고 했는데 투자 안 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수 쪽에서 경제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주도로 성장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내수부문도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내수도 부진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왜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보면 가계소득이 부진하지요.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통계청 가계조사를 보면 실질소득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게다가 소비성향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요. 이것

은 소득도 문제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다. 그래서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주택 가격 상승, 전세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거 올려주느라고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저축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표가 좋은 쪽은 건설투자 쪽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좋다고 좋아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택 건설 늘고, 분양 늘고, 가격 오르고 그런 와중에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관리하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를 어디에서 봐야 될까 우리 초점은 가계소득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켜주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 7월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하실 때 그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소득을 가계로, 또 사회로 환류하겠는가? 거기에서 그런 모양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큰 줄기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그쪽에서 우리 경제활성화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세부적인, 각론적인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유병규 원장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격과잉 5개 업종에 대한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물론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큰 조선 해운에 대해서는 정책이 일부 발표되기도 했습

니다만 여태까지 발표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토론자 유병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현재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특성, 또 관련법규 등에 따라서 3개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해운 조선과 같은 경기 민간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부실화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서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걱정이고 있는 향후 공급과잉업종이 될 가능성이 큰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서 이런 과잉업종들을 상시로 구조조정하려는 이런 세 가지 트랙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은 일단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최근 산업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전에 1970년대나 1980년대 또 외환위기 당시처럼 정부주도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부추기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기업 지배구조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기업에 한해서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 제약 중에서도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중에서 시장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부터 국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서 사전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력산업 전반이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점차 모두 과잉업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현재 상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에 신축성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문제는 바로 대기업의 문제입니다. 국내 철강산업하면 포스코이고, 자동차산업하면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완전 배제하지 말고 오히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앞으로는 가급적 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거대자금 투입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해서 경영인을 선임할 때 재무전문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아는 사업전문가를 보내서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역량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사업구조

조정 성공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원장님 특별한 재주가 있으시네요. 짧은 시간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최경선 논설위원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이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정책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토론자 최경선 일단 유 원장님께서서는 정부를 굉장히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통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일단 정부가 쇼는 하는데 도대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업은행 고위층을 만나 가지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11조원 자본화충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돈을 넣어서, 국민세금을 넣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을 산업은행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쓸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 돈 없어도 우리는 BIS비율을 다 맞추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후순위채펀드 지금 금리도 싸고 해서 다 조달할 수 있는데 저거 왜 하자는 겁니까? 하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진작 했어야 될 구조조정을 미루고 미루고 안 하다가 여론이 정부가 뭐냐고 다그치니까 뭔가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분야에 무슨 돈을 쓸지도 모르면서 일단 쇼는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이 정부가 구조조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지요.

최근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사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것을 못 사게 만들었어요. 이게 케이블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지금 가만 놔두면 망하는 기업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전에 시장에서 자기네들끼리 M&A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정부가 막아서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도와줘야 될 것을 제대로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주형환 장관께서 6월말에야 처음으로 제1차 범부처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 지금 5개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청사진을 마련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대선이 내년말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내년에 대선 다가오는데 이제서 구조조정하겠다고, 청사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지금 청사진 마련해 가지고……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조선업만 하더라도 몇 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권 말에 해 보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이가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대감이 플로어에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조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고용불안,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거제도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특히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하남 원장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용시장의 여건은 더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고

용불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토론자 방하남 정부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나오게 될, 지금 현재도 과거 1~2년 전부터도 이미 조선업쪽에서는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침체로 인해서 많이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근로자의 숫자가 꽤 많다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선 3사가 내봉을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그것을 다 합쳐보면 한 5만 내지 6만 정도가 조선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숫자도 숫자이지만 길게 보면, 사실 경기침체 얘기지만, 또 조선업이라는 것을 우리 국가가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침체기에서 회복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실업의 문제하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업종에 5년, 10년, 20년씩 근무하던 사람들이 만약 나오게 되면 기술인력의 유실부분들도 국가 산업인력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에 나오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좀더 강화하고 기간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2개월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고용특별지원업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과거에 경제침체기에 실업급여기간을 9주 정도 늘리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급여금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노사가 합의한다면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다른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용위기업종 지정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재정들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효과가 낮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그 징후들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선업이 끝이겠느냐? 앞으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것까지도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어가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산업구조조정이 이번 이벤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면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안정을 시키고…… 또 하나 산업과 산업간의 인력이동이라든지 배치, 전환 이런 부분들을 국가 산업차원에서 어떻게 재훈련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유사업종이라든지 관련업종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을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접근이 아닌 그야말로 맞춤형, 맞춤형으로 실업대책이나 고용안정대책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세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조선업 부흥기를 맞았습니까? 라는 그 전에 우리가 조선업을 뺀어온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들도 나오곤 했습니다. 스웨덴의 말뫼 같은 데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말뫼의 눈물, 말뫼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선업을 가져올 때를 생각해 해보고, 말뫼가 그 이후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그다음에 노사가 같이 앉아서 지혜를 짜고 해서 말뫼의 조선업이 추락했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다른 산업이나 경쟁력으로 살아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금은 벤처나 IT쪽으로 정말 번창하는 도시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이나 구조조정 정책들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이 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만 할 게 아니고 노사가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전체 산업의 문제이고 우리 산업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노사, 그다음에 지방정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정책과 자금을 가지고 앉아서 미리미리 사전에 전략을 짜고 실제로 벌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투입하는 재정과 정책수단들이 정말 세밀한 것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고용지역으로 선포한 평택에 지역구를 두신 원유철 대표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관련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한 연구에 따르면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도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대안이 있습니다. 맞춤형이나 지역경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전업할 때 과연 교육만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직업 전환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서 정착할 수 있는 해안이 있을는지요.

토론자 방하남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업구조 자체가 그동안 개발경제를 이끈 산업구조 자체가 21세기형의 혁신,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들이 있고, 또 앞으로 새로 개척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인력 정책은 고용정책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욱이나 산업정책과 함께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플랜을 짜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시적으로는 직업훈련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의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마는, 바우처 시스템이나 모든 걸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훈련시장에서 너무 경쟁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국가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은 점점 도태를 하고 정부지원금에 의해서 각각 개인들이 숏프로그램을, 단기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런 업체들만 성업하고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시적으로 국가산업인력의 장기적인 플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에 있어서도 각 산업 간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정책 차원에서의 미시적인 대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구 논설위원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토론자 정남구 그 말씀은 잠깐 뒤에 간략하게 드리고 왜 그렇게 질문하면 사안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정 업종 종사자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실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전체 우리 고용시장을 보면 이것은 이미 상시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6월 고용동향이 나와 있는데 실업률이 3.6%였지요? 경남지역이 1%p 올라갔는데 전체 실업률은 0.1, 작년보다는 0.3%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가 된다고 해서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얼마 안 되고 몇 달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자리 지수 계속 떨어뜨리면 고용률 빨리 올라갑니다.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고용통계를 길게 보면 과거 우리 비정규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시간제 근로자 100만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금 11.2% 정도 되지요.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올해 3월로 보면 한 달 평균 월급이 75만원이지요.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1주일에 1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거의 절반 됩니다. 지금 숫자로 보면 지난 6월에 125만명 나왔는데요 6월 봤더니 18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이 6% 늘어났고요. 5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5.9%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용시장 전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실업자 생겨도 다른 분들 다 어디든 가서 저임금 받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고용시장 많이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데 그게 기업단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구성의 오류로 계속 가고 있지요. 노동시장이 분명히 경직적인 곳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대기업, 공공부문 상당히 경직적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꾸로 바닥을 향한 경쟁, 그리고 헝그리정신을 저절로 생기게 만드

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변화시켜갈지, 단기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변화시켜갈지를 같이 모색하면서 구조조정 상황에서 고용대책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최근에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최저임금 올리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비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엄청난 공급과잉이 있지요. 한국의 은퇴세대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하는 분들 없습니다. 연금 없어서 그렇지요, 다른 수입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실업자가 되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앞으로 실업급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세대들이 어떻게 일자리 경쟁에서 뒤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확충할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과제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충분한 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과연 효과적인 다른 대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외 다른 정책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장기사이클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한다 어쩐다 해서 다음에 영원히 안 나는 법도 없는데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이 사장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나라 경제의 장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사업들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또 장기적인 과제를 잘 말씀해 주서

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용을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규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잘 살리고,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세대 성장동력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조업에서 시작한 나라들이 서비스업으로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같이 제조업이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도 아마 그러한 걱정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론자 유병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앞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것과 정책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산업쪽의 특성이 이전 산업과는 달라졌기 때문인데 일단은 고도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또 거대자본이 들어가고 또 투자회임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전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특정 업종중심의, 공급창출 위주의 직접지원정책 중심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시장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정책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발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제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이 나오듯이 산

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R&D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R&D는 민간 R&D를 보완해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 우리나라 R&D를 보면 정부 R&D는 한 20%뿐이 안 됩니다. 70~80%가 전부 다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 R&D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지원정책이 앞으로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리스크가 굉장히 있고, 투자회임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위험 체감형 금융세 제정책을 정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인적 자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적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신산업동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산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주력산업과 연계해서 결국은 신산업들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어떻게 잘 융합, 협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런 제도와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경선 논설위원님,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접근방식 중의 하나가 창조혁신센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토론자 최경선 그렇지요.

사회 김준기 말씀 주시지요.

토론자 최경선 유병규 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로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정부를 많이 비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을 비난해야 되겠는데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데 다 발굴되어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 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15개 산업, 일본도 열몇개 산업, 한국도 10개 산업 이렇게 신성장동력산업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이 발표하는 이 신성장동력산업은 다 기업체입니다. 불려드릴게요. 로봇산업, 빅데이터산업, 사물인터넷산업, 인공지능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의료헬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기업체고 다 알아요.

신성장동력산업이 무엇인지 몰라 가지고 육성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방법도 압니다. 유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했지요? 방법도 알고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득권층의 밥그릇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원격의로 한 번 볼까요? 미국, 일본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대대적으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의사들 밥그릇 지키느라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사는 것, 미국 일본에

서는 몇 천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통제라든지 열 개밖에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사들 밥그릇 지키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는 의약품 집으로 택배됩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집으로 택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약사 밥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편하거든요. 원격진료시범사업 해 보니까 국민들 80%가 찬성해요. 왜냐? 해 보니까 편하거든요. 편리하거든요. 국민들은 그게 편하다, 현 제도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의사 약사 밥그릇을 지키느라고 규제해 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사 약사 밥그릇 지키느라고 규제완화를 안 하는 세력이 어디일까요? 다 가면 보수꼴통들이 거기 아마 지키고 앉아 가지고 규제완화를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진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서 그걸 막고 규제완화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완화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도 10대 산업, 우리도 10대 산업 이렇게 육성산업을 발표해 놔는데 대부분 겹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육성예산은 연간 20조원입니다. 중국의 육성예산은 144조원입니다. 우리의 7배가 넘지요. 일본도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우리가 더 신속하게 더 효율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국회만 오면 아무것도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아까 김준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득권, 이해집단들의 지대추구적인 행태에 대한 말씀과 유사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면서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신성장동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과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생

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준경 원장님, 우리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을는지요.

토론자 김준경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0.3%, 뒷걸음 쳤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앞서 방하남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서 근로자 각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적 구조로 인해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고용부와 공동으로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훈련의 경우 훈련참가자격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건수의 98.3%가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1.7%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입장은 훈련의 기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도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고, 해고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굳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훈련의 기회도 없고, 사실상 거의 없거니와 설령 훈련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기대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 갈 희망이 없으니 대충 저숙력 일자리를 전전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직의 일자리 독점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합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생산성 향상

의 핵심이고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운 데 재정건전성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말 정도 되면 우리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우리 원장님께서서는 너무 쉬운 복지도 안 좋고, 또 너무 쉬운 증세도 안 좋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 재정이 항상 비교하는 게 OECD 비교해서는 항상 건전하다, 건전하다 하는데 원장님이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시건대 우리 재정건전성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토론자 박형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재정은 재정지표상만 보면 정말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의 추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거버넌스 측면, 그다음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전망 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를 넘어선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말 현재 OECD 전체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110%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또 이 때문에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니 재정건전성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자

꾸 써서 정부가 뭔가를 해라 라고 권고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을 돌아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정적자폭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건전한 노력을 통해서 많이 재정수지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최근 또 3~4년 사이에 다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공공부담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부재정 전체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재정의 거버넌스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고, 지방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공공부문 쪽에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향후 인구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가 정말 눈에 뵈히 보이고 이것에 국가재정의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남북통일 비용 등등을 감안해 보면 정말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재정에 대한 부담, 압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세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게 재정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성장전략 자체를 바꾸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우리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한 데 소중한 국가재정이 라고 하는 재원이 소진되고 있고, 어떤 한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중앙, 지방, 사회보험, 공공기관들이 서로 각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 미래 대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하고려 없이 지금 당장에 우리 어려움만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자꾸 써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이렇게 재정을 투입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건전한 재정을 그냥 놔두고 지키자. 지금 써버리지 말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국가 재정을 투입할만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쓰자라고 하시는 분이 생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재정정책의 방향 자체가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아주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추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있었지요. 작년, 2015년도에도 10조 정도의 규모로 추경, 그다음에 재정보강해서 20조 정도 들어왔었지요. 총론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지금 경제상황을 비춰본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쪽에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논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론자 박형수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처럼 빚을 내지 않고 여유재원을 가지

고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추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야기시켰던 원인을 해소시키는, 따라서 일자리 창출효과와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업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빨리 집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금의 우리 경제의 문제가 이런 일시적인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해내야 될 앞으로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또 경제구조 개혁 이런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에서 이러한 정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추경사업들이 선정되어야 우리가 소중한 국가재정 자원 자체가 경기도 부양하면서도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그만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추경에 대해서는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이 더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경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3분 비디오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증세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인구학적 변화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변화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증세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세 가능한 분야로는 법인세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세제제도라는 것이 아마도 앞으로는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 때 많은 화두를 던진 바가 있고요.

최경선 논설위원님, 조세구조, 세제구조, 증세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토론자 최경선 일단 가장 쉽게 법인세 인상을 얘기합니다. 기업 지금 유보금이 많다고 하고 투자는 잘 안 이루어지니까 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어서 정부가 쓰자 이런 취지인데 기업이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가 투자하면 더 잘합니까?

저는 일단 세율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세율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율만 보고 법인세를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걷히는 돈을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실제 걷힌 법인세 세금액을 비율을 따지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는 더 높아요. 많이 걷힙니다. 개인소득세는 OECD 평균보다 적게 걷힙니다. 왜냐? 개인소득세는 이러저러한 면세혜택들을 마구 줬거든요. 그래서 세율은 높는데 실제 걷힌 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높이자. 세계적이 추세라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낮춘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만 20개 정도 될 정도로 전체적인 추세는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그러느냐? 일단 개인소득세를 높이거나 면세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개인들이 바로 반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세율을 올려봤자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자꾸 법인세금만 올리자고 쫓아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겁한 조세정책이라고 봅니다. 투표권 없는 법인에게서만 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

어 있는 개인소득세의 면세제도를 없애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하겠습니까.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정남구 논설위원님?

토론자 정남구 증세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어느 정치인도 증세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함부로 깎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구적으로 세금을 깎아왔습시다. 특히 법인세를 엄청 깎아왔는데 그래서 외국 기업 많이 유치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가요? 그랬으면 이렇게 2%대 성장이 몇 년간 계속되지는 않았겠지요.

재정건전성 얘기할 때 세출도 중요하지만 재정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조세부담률 18%대지요. 20%대에서 내려왔는데 이 정도 재정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실을 하겠다 싶으면 일본과 같은 재정 위기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 늘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경선 위원께서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소득이 엄청 많거든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법인기업소득, 국민계정으로 보면 70% 늘었습니다. 법인세 얼마 늘었을까요? 24% 늘었습니다. 엄청난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졌지요. 연간 10조원이 넘습시다. 법인세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증세는 결코 설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은 소득세일 텐데 이것도 정말 어렵습시다. 재작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쪽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조세형평성 면에서도 그렇고 세수안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정부가 다시 후퇴했는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후퇴하는 과정에서 과세 면세자 비율이 다시 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마는 정치권이 협력해서 면세점을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내려서 조금씩이라도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세의 재정기여비율을 우리나라도 좀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득세 매우 적게 내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몇 년 안에 과거와 같은 조세부담률 수준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증세에 대한 논쟁은 저희가 나중에 정남구 위원님과 최경선 위원님 두 분만 따로 모셔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데 박형수 원장님, 중장기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재정건전화율 유도를 위해서 이 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는지요.

토론자 박형수 앞에서 제가 우리 재정의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또 재정이 여러 가지 경제주체별로 파편화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재정의 거버넌스가 문제이고, 또 향후 앞을 내다보면 전망이 우울하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울한 양

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세 측면을 극복할 수 있게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와 같은 재정총량지표 자체의 상한을 설정해서 이를 행정부로 하여금 꼭 준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이런 악화되고 있는 재정지표를 관리를 강화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국가에서는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을 편성하듯이 재정준칙을 만들고 준수케 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약간의 유예 정도를 주고 다시 재정건전성을 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장치는 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자체는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전체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 내지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이 특별법 안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재정 외에 사회보험재정-미래를 내다보면 걱정되고 있는 사회보험, 지방재정-돈만 달라는 지방정부, 또 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의 문제 등등을 정말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재정건전화정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고 재정을 어디에다 투입할 것인지 서로 조율하는 장치가 지금도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큰 부담을 야기하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 부처별로 전망하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겠다 지금 이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한 데 모아놓고 사회보험 전체를 한꺼번에 통일된 방식으로 전망하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고 개별 부처에 맡겨놓아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보았듯이 보다 중요한 문제는 뒤로 사라지고 아주 표피적인 개선만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총괄해서 전망하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지출을 늘림에 있어서 통제장치가 굉장히 많이 약하다, 추정심사도 하고 국회에서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하나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계끔 PAYGO제도를 현재도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다 확대해서 입법부도 PAYGO를 하도록 만들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성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재원대책을 굳혀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의 과학화, 합리화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국회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예산결산과정에서의 국회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합리적으로 또는 증거기반적으로 되어야 된다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러한 분야를 포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김준경 원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준경 재정지출 통제장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빠짐없이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쪽지에 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쪽지예산 관행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쪽지예산 비판 기사가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칭찬거리가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풍토라고 보여 집니다.

예산지출 관련 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국민과 언론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쪽지예산의 대부분은 SOC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SOC 투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민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SOC 시설들의 한계자본생산성이 이미 1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SOC 투자에 추가로 100원만큼 투입해도 우리 경제생산성은 100원보다 낮은 80원, 90원만큼만 현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시급을 요하는 SOC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SOC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조사가 된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야 하고요. 지역주민의 민원만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관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역의 민원만을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은 과거 방만한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한

이웃나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최경선 논설위원님과 정남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국회에서의 절차 또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최경선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뭐가 잘못 됐는지 지적하신 것들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실은 집행계획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 어디에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좋은 계획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산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 결산은 거의 뭐 획 지나가듯이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회 예결위가 상시체제로 바뀌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감사원이, 나중에 헌법 개정하게 된다면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 김준기 예, 감사합니다.

정남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정남구 저는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3수 했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도 예산은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얘기해 주는 것 굉장히 폐쇄적이고 국회 심의내용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국회에 산정정책처가 이런저런 자료를 내서 알고 있는데 세출구조조정 잘 알려면 예산정책처 기능부터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출구조조정 잘 알려면 예산심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국회가 비공개해야 될,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공개해서 언론이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겠지요.

2009년에 일본에서 정권교체를 했던 민주당에 첫 해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교시와케’라고 해서 예산국책사업 재분류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공개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뜯어놓고 했습니다. 좀 선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첫 해에 1조 8000억엔, 우리 돈으로 20조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그게 완전하게 잘 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투명하게 심사하면 역시 불필요한 부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 우선순위를 공론에 붙일 수 있거든요. 일본도 1년하고는 바로 없었을 정도로 관료나 이익단체들의 저항이 매우 강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국회에 이것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경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김준경 감사합니다.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여력, fiscal space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KDI의 연구에 의하면 기대수명이 실제 기대수명시에 비해서 과소 예측해 온 문제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장수리스크지요. 장수리스크가 저희들은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소 예측하는 모형추계를 이용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26년에는 2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인구보다 100만명이 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망률, 기대수명의 예측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추계모형을 빨리 개선해야 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경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준기 다음으로 정남구 위원님.

토론자 정남구 나라가 잘 되려면 신뢰가 아주 중요하지요.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 국민 상호간의 신뢰가 있을 때는 나라가 여러 적극적인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사해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이고 그래서 공공재 공급도 늘리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다른 조사를 해 보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이 정치인, 국회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여기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파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합의해서 실현하려는 노력,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김준기 제가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방하남 원장님께는 플로어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특별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방하남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정치의 장이고 정치에는 반드시 국가정책과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여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현대정치의 필수요건인데 오늘 토론하면서 재정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여야가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재정투자. 이것은 미래지요, 국가미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서는 국회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좋은 플랜들을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추경이든 뭐든 재정투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어떤 세금을 걷거나 지출했을 때 경향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근본적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데 무엇을 위한 성장이나,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장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국민의 편익과 행복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일종의 국민과 정치, 정책 정부의 대화의 중

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가지 추경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경제로 잡아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중간단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의 플
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
떤 결과들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전
달되어야 되고 추경을 단지 편성한다, 재정을 어디에
투자한다, 양이나 규모만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안심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재정투자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큰 재정이
지요. 사실은 국가에서 국민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재정인데 투자의 방향성과 투자가 적절하게 됨으로
써 어떤 공공 효용성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것들도 논
의를 앞으로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
니다.

사회 김준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박형수 독일은 저출산·고령화의 어려움 속
에서도 독일통일을 이루어냈고 통일 이후 어려워진
경제 재정문제를 하루치 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바꿔서 극복해 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독일하고 비슷한 저출산·고령화의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의회와 정책결정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개혁을 미루는 바람에 잃
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듯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당면문
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인 어젠
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 전략과 비
전을 만들 능력이 충분하고 답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힘을 한 데 모아서 이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으
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같은 전문
가들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
해서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증거기반한 정책결
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토론과 숙고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공해야 되겠고,
국회를 비롯한 정책결정자와,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언론에서는 정말 이념적인 갈등과 논쟁에서 벗어나
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이를 위해
서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노력을 경
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하는 첫걸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선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최경선 저는 이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시대정신 중에 중요한 것이 양극화 해소라
고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창조 개혁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기득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
사 약사를 얘기했지만 의사 약사 그분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편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동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규직 대기
업 노동자의 예를 가장 많이 대변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기에 몇% 가입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가 가장 편
한 집단이 기득권 집단입니다. 의사 약사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다 뽕뽕 뭉쳐 가지고 결집된 표를 행
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득권층과 야합할 유

혹을 많이 느낍니다.

국회만 오면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규제가 그대로 남고,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대정신에 20대 국회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무리

사회 김준기 감사합니다.

이제 맺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국회는 민생국회, 경제국회, 정책국회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원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또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비용을 낮추고 거래비용을 낮춰서 국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님 정책수석실에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조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예산정책처도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국회의 한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4개 국책연구원장님과 또 두 분의 논설위원님을 한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섯 분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개원 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결과보고서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발간일	2016년 8월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제 작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 · 2269 · 9917)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6)
-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